

# 실용뉴스

## 서울시, 악취단속 강화 정화조-대기배출 사업장 시,과태료 부과 등 추진

서울시는 악취를 발생시키는 정화조에 대해 시설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각종 악취발생 저감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지난 2월 15일 밝혔다.

시는 오는 4월까지 직원 순찰과 시민 신고 등을 통해 악취 발생원에 대한 일체 조사를 벌여 악취를 발생시키는 정화조에 대해서는 청소를 실시토록 행정지도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대기배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 악취 발생 때에는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용자 지원 등을 통해 악취발생 시설물을 개선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 동두천시 병원등 감염성 폐기물 집중단속

동두천시 관내 병·의원 등 감염성 폐기물 배출 업소에 대한 특별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최근 시에 따르면 감염성 폐기물 배출 업소들의 인식 부족으로 국민

건강 및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내 병·의원 등 61개 업체를 대상으로 부적정 처리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시는 이를 위해 4명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 3월부터 6월까지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 환경신기술업체, 공사입찰 가점 2%로 확대

이달부터 환경신기술 보유업체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환경시설공사에 입찰할 때 평가총점의 2% 이내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과 환경신기술 마크제 도입, 신기술 산업화자금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환경신기술 개발 촉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이달부터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신기술 보유업체는 환경시설 공사 입찰 때 낙찰자 선정에 관한 평가총점의 2% 이내에서 가점이 부여되고 기술검증을 받지 않은 업체는 총점의 1% 내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환경부 산하기관 발주공사에 참여하는 환경신기술 업체에 대해 총점의 1%까지만 가점이 적용돼왔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환경신기술 마크제를 도입해 신기술 업체로 지정된 회사가 제품이나 광고에 이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신기술 산업화 융자금을 연간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환경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면 검증비용의 절반을 국고에서 지원하며 인증신청을 연중 수시로 받고 기술내용 사전심사제를 폐지하는 등 기술검증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 구(區)의 배출부과금 부과는 부당

인천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2일 동양제철화학(주)이 남구를 상대로 낸 "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 남구가 동양제철화학의 배출물질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정화되지 않은 상태의 오염된 그릇에 담은 시료로 오염도를 측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료채취 당시 폐수 배출시설 주변에서 오염현상을 발견치 못하고, 환경피해 신고나 민원제

# 실용뉴스

기 등이 없었다는 점도 구(區)의 검사결과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덧 붙였다.

동양제철화학은 지난해 5월 인천 남구가 학익동 소재 인천공장 방류수에 대한 검사결과, 총인(TP) 농도가 배출허용기준(8ppm/l)을 86배나 초과한 689.04ppm/l로 나와 50억8천만원의 배출 초과부과금을 부과하자, 소(訴)를 제기했다.

## 동절기 수질오염사고 방지 관계 기관 합동대책 추진

환경부는 작년 말부터 금년 1월말까지 강수량이 적어 수질오염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건설교통부, 농림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물관리 관련기관 및 16개 시·도 등 관계관이 참석하는 "동절기 수질오염사고 방지 관계기관합동 대책회의"를 지난 2월 12일 개최하여, 기관별 수질오염사고 방지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대책방안을 시달(통보)하였다.

환경부는 수질오염사고방지를 위하여 유역(지방)청과 시·도에 전국 수질측정망의 운영 철저, 하천감시 활동 및 사고우려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2.16~3.13)을 1개월간 실시하기로 하였고, 유류·유독물 등의 수송차량 통행제한도로

(팔당호 등 8개 주요 상수원 주변 20개구간) 집중단속과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 등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철저 등을 지시하는 한편 건설교통부, 농림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저수지 운영관리기관에 대하여는 댐·저수지의 현재 저수량, 향후 용수공급전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질악화 등 사고 우려시 신속한 비상방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요청했다.

## 환경오염사범 발 못 붙인다

낙동강환경감시대는 낙동강유역 상수원 상류지역이나 수질오염도가 높은 지역의 유해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집중단속키로 했다.

지난 2월 11일 낙동강환경감시대에 따르면 집중단속 대상 사업장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와 취수시설 상류지역 소재 사업장을 비롯 안동 반변천·영주 서천·대구 금호강·등 수질환경기준을 초과한 구간 내의 사업장, 유해물질 배출사업장 등이다.

## 군장산단 폐수종말처리장 돈 먹는 하마

군장국가공단내 폐수종말처리장

1단계건설공사가 끝났으나 폐수유입없이 가동됨으로써 공장용지의 분양가 상승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이 제대로 가동될 때까지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토지공사 군산사업단에 따르면 군장국가공단내 11만평에 지난 2001년부터 총 2백71억원이 투자돼 당초 계획된 하루 8만톤 처리능력의 폐수종말처리장 가운데 우선 1단계로 3만톤 처리능력의 처리장이 지난 해 말 완공됐다.

이 처리장의 건설에는 지난 2002년까지 국비 50%가 지원되다가 2003년에는 1백%의 국비지원이 이뤄졌다.

그러나 군산하수종말처리장에 폐수를 처리하는 대상전분당공장을 제외하고 자유무역지역은 물론 공단내에 현재 입주해 가동하는 기업이 없어 이 처리장으로 폐수의 유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공사는 처리장에 설치된 기계와 장비 등의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해 무부하 운전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유지관리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정상적으로 폐수처리장이 운영될 때까지 이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연간 5억원씩 투입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 실용뉴스

## 지자체 환경기초시설-방류수 수질기준 안 지켜

대구·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면서 부유물질, 총질소, 대장균군 등 방류수 수질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2003년 한 해 동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 마을 하수도 등 180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방류한 55개 환경기초시설을 적발, 행정처분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문경시는 문경하수종말처리장 등 18개소의 하수도시설 가운데 11개 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위반율 61%), 적발됐다.

또 김천하수종말처리장 등 15개 하수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김천시는 6개 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위반율 40%)했으며 영덕군은 16개 하수도시설 가운데 5개 시설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위반율 31.2%)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위반 내역별로 폐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영주 가흥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은 총질소를 방류수 수질기준(60mg/l)보다 4배 초과한

255.720mg/l로 방류했으며 포항청 하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도 부유물질을 기준(30mg/l)보다 2배 초과한 65.7mg/l를 방류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문경·영천·울진온정·영주하수종말처리장 등 4개소가 대장균군 기준을 2.8배 초과 방류했으며 마을하수도시설은 117개 시설 중 48개 시설에서 기준을 초과해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천시 황소마을하수도의 경우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기준(20mg/l)보다 약 9배나 초과한 177mg/l를 방류하다 적발됐다.

## 포스코 광양제철 등 환경오염 업소 896개 무더기 고발

포스코 광양제철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896개 업소가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법을 위반해 무더기로 고발조치 당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4.4분기에 전국 시·도, 군·구의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소 3만6천609개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이중 포스코 광양제철 등 위반업소 2천25개를 적발했다고 지난 2월 5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배출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포스코 광양제철과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한 케이티세라믹 예산공장 등 위반정도가 심한 896개소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환경부는 이와 동시에 2천208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업정지(215건), 사용중지(345건), 폐쇄명령(299건), 개선명령(543건) 등 행정처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했다.

한편 단속업소 수 대비 위반사례를 나타내는 위반율은 경기도가 12.6%로 가장 높았고 울산(10.5%), 인천(7.3%)이 뒤를 이었으며 전북(2.4%), 제주(2.6%), 서울(3.4%)은 비교적 위반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 경인환경청, 환경친화기업 지정 확대

경인지방환경청은 SK케미칼㈜, 한국도시가스 인천생산기지에 이어 LG과워를 2월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했다.

LG과워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수도권지역의 환경친화기업은 모두 35개로 늘어난다.

경인환경청은 지난 연말 환경관리현황, 환경성평가, 환경개선계획, 이행상태 등을 정밀 심사, SK케미칼, 한국도시가스 인천생산기지를 환경친화기업으로 각각 지정한 바 있다.

# 실용뉴스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경영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제도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 점검 면제, 허가를 신고로 대체, 자금융자 우선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 반입료 4월부터 인상기로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중 반입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가 오는 4월부터 t당 2만7천60원으로 인상된다.

최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생활폐기물에 비해 건설폐기물의 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기술개발에 2007년까지 6천600억원 투입

중장기 전략적 환경기술 개발을 위해 향후 4년간 6천600억원이 투입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오는 2007년까지 실용적 환경기술 개발을 위해 민간자본 2천억원을 포함해 총 6천600억원이 투입되는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2단계 사업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환경부는 1단계 사업으로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2천800억원을 투자해 현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후처리 위주의 환경기술 460개를 개발해왔다.

환경부는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사업추진분야를 중점전략기술 개발 과제, 환경기술 실용화작업, 미래원천기술 개발 등 3개 단위사업 체제로 구분하고 2월에 사업공모를 받아 연구과제를 선정한 뒤 6월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기술개발 과정에서 기업 등 민간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향후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료 부과율을 기존 50%에서 40%(비영리연구기관은 24%)로 낮출 계획이다.

##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5단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원 설정 각 배출원에 대한 산정방법 선택 자료수집과 배출계수의 선택 배출량 추정을 위한 계산틀의 적용 온실가스의 자료수집과 요약 등 5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째, 온실가스를 중요 배출원에

따라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고정연소(보일러, 난로, 터빈, 히터, 엔진, 소각로 등 고정기계에 의한 연소), 이동연소(자동차, 트럭, 기차, 비행기, 선박 등의 교통수단에 의한 연료의 연소), 공정배출(물리적, 화학적 공정상의 배출), 누출 배출량(의도적/비의도적인 배출) 등 4가지로 나누는데, 분류된 배출원에 따라 적용가능한 계산틀이 결정되는 만큼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둘째, 배출량 산정 방법을 선택한다. 일반적으로 배출계수(배출원의 특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를 문서화)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법이 통용되는데, 배출계수와 행위 요소(소비한 연료량, 생산된 생산량)를 곱하여 배출량을 구할 수 있다. 그 밖에, 연료사용 자료를 통한 CO<sub>2</sub> 배출량 계산방법과 물질수지밸런스에 기초해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모니터링에 의한 직접 측정방법 등이 있다.

셋째, 행위자료를 수집하고 배출계수를 선택한다. 이는 행위자료와 배출계수를 곱하여 계산되는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써, 3가지 범주(scope 1,2,3)를 기준으로 행위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각각의 배출원 성격에 따라 배출계수가 다르게 적용된다.

# 실용뉴스

넷째, 배출량 추정을 위한 계산틀을 적용한다. 기업은 배출량 추정을 위해 1개 이상의 계산틀을 적용시켜야 하는데, 계산틀의 종류로는 고정연소, 이동연소, 냉동기와 공조기의 사용과 같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공통 틀이나 알루미늄, 철, 시멘트 등의 분야에서 활용가능한 개별 틀 등이 있다. 그리고, 기업 자체에서 온실가스 계산틀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다섯째,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위해서는 현장자료의 수집과 요약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보고관련 자료가 체계화되면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가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자료의 수정이 필요할 때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단

계이다.

## 국내 최초 LCNG 충전소 가동

우리나라 최초의 LCNG 충전소가 지난 1월 28일 대전시 동구 낭월공영 차고지에 설치되어 천연가스버스에 충전을 시작하게 됐다.

LCNG 충전소란 도시가스 배관망이 설치되기 어려워 CNG(압축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없는 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 LNG상태(액체)의 가스를 이동한 후 이를 기화시켜 CNG상태로 충전하거나 또는 LNG 상태 그대로 충전을 하기 위한 겸용시설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기 도입하여 운영중인 충전시설이다.

이번에 설치된 낭월 LCNG충전소

에서는 하루에 천연가스버스 1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이며, '06년까지 총 200대의 충전규모를 갖출 계획이다

## 수원, 음식점 등 1회용품 사용 신고자에 포상금

오는 4월부터 수원시내 대형 음식점과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내 1회용품을 사용하는 사업주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수원시는 최근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따라 시의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 오는 4월부터 신고 포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직접 써본 환경기술인들이 인정한 **에코테스트** 현장 방류수측정키트

100회용 ₩55,000원 / 구입문의 : (02)852-2291